

(가칭)대전정치개혁시민연대/ (가칭)전국시민정치네트워크 결성을 위한 공동워크숍 자료집

# 정치개혁과 시민사회의 과제

◆일 시 : 2003년 6월 26일(목) 오후 4시

◆장 소 : 충청하나은행 강당

(가칭)대전정치개혁시민연대 준비위원회 / (가칭)전국시민정치네트워크 준비모임

## 정치개혁과 시민사회의 과제

▶ 사회: 차성수(동아대 교수)

▶ 발제

1. 정치동향과 시민사회 대응보고 - 김박태식(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원)
2. 17대 총선과 시민사회의 역할 - 조현옥(한신대 학술원 연구교수 · 정치학)
3. 정치개혁과 의회개혁,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정대화(상지대 교수 · 정치학)

▶ 토론

한경호(前 원주총선연대 대표)  
이지훈(제주환경운동연대 대표)  
박종훈(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유정배(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  
하승창(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박병섭(상지대 법학과 교수)  
박재율(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충재(대전 YMCA 사무총장)  
김용분(대전 여성환경포럼 대표)

# 정치동향과 시민사회 대응보고

김박태식(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원)

우리 사회의 개혁열기가 확인된 16대 대선 이후 '개혁'을 화두로 다양한 논의와 움직임이 있으나 통합적인 비전·리더십의 부재와 정치권의 개혁의지의 결여 등으로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치에 대한 대중적인 민심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사회발전의 주요 걸림돌인 정치를 개혁하고 내년 총선에서 제대로 된 의회개혁, 정당개혁을 이루기 위해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특히 지역으로부터의 동력의 형성이 주목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 1. 정치권의 동향

### 가. 기존 정치권의 논의

○ 개혁세력의 대선승리는 정치기득권 집단인 한나라당, 민주당 양당에 정치개혁에 대한 강한 압력이 되었으나, 양당은 대중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하는 등 개혁의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로는 개혁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 ○ 민주당

- 대선 이후 개혁특위를 가동했으나 구주류의 반대로 정당개혁안이 좌절되었고, 보선 이후 신당론이 강력히 부각되었으나 내부갈등으로 혼선을 겪고 있다.

#### ○ 한나라당

- 마찬가지로 개혁특위를 가동하였으나, 지도체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중에 전당대회에 진입, 사실상 개혁논의는 종료되었다 할 수 있다.

- 지역대표 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 25일 개표

당대표 선거: 26일 전당대회에서 개표

#### ○ 정치개혁입법

- 지난 4월14일 재구성된 국회 정개혁위는 이달말 활동 종료를 앞둔 가운데 13일 전체회의를 갖고 선거구제, 의원정수 등을 포함한 정치개혁 방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가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격 협상에 착수하지 못한 채 산회, 연말이나 내년 3월까지 활동시킨 연장을 추진키로 했으나, 여야 모두 총선에서의 유불리를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어 생산적 논의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

- 여야의원 60여 명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인사 등이 참여한 '정치개혁추진 범국민협의회'는 2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50여 개 사항의 정치개혁방안을 마련, 정치자금법등 관련 4개 법률에 대한 개정을 추진키로

## 나. 신당논의

### (1) 민주당의 논의

○ 대선 이후의 민주당 신당창당논의는 잠시 소강상태를 띠다가 보선 이후 본격화되었고, 최근 민주당 신·구주류는 1주일 동안의 물밑대화를 벌인 후 24일 각각 '신당추진'과 '당 사수'를 향한 독자행보를 가속화

- 신주류는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신당추진모임 회의를 열어 신당 창당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분과위 구성 문제를 논의, 그러나 계속된 의견불일치로 지지부진한 모습

- 구주류의 '민주당 정통성을 지키는모임(정통모임)'도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왜 민주당을 지켜야 하는가'를 주제로 공청회

- 정치개혁 보다는 권력투쟁의 양태로 보임으로써 민심 이반

○ 민주당 신주류 중심의 개혁신당론

- 현재 세 대결 양상으로 보아 분당이 예상됨

- 신주류 강경파의 경우 '민주당 신주류 + 한나라당 진보파 + 개혁당와 재야세력 + 30-40대 전문가 그룹'을 망라한 해쳐모여식 정계개편 구상

- 민주당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어 다른 신당추진세력과 갈등양상을 보일 수도 있으며, 내부에서의 이해관계의 차이 등으로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

### (2) 한나라당 개혁파

○ 전당대회를 앞두고 잠복하고 있던 한나라당 개혁파 의원들의 탈당과 신당추진설이 급부상

- 전당대회의 결과에 따라 집단 탈당할 가능성

- 민주당 신주류, 한나라당 개혁파, 개혁당 3주체의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자 하나 통합민주당으로의 영입을 경계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신당 논의를 예의 주시

### (3) 개혁신당 추진세력

#### ○ 개혁국민정당

- 민주당 분당 또는 해체를 전제로 모든 개혁세력의 단일정당추진
- 시민사회 명망가의 참여촉구

#### ○ 범개혁신당추진운동본부

- 2003년 5월 12일 최초 논의, 5월 29일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가칭)범개혁신당 추진운동본부 준비모임"을 대표해서 박명광 경희대 교수 및 각 지역 단체대표 10여명과 2,100여명의 서명발기인 이름으로 범개혁신당 건설을 제안하는 대국민제안 기자회견
- '범개혁신당 추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6월 19일,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 1차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개혁당 현역 지구당 위원장들과 신진 개혁성향 정치인 뿐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의사, 교수, 언론인 등 전문가 그룹도 상당수 포함된 120명의 출마 예정자 명단을 공표

#### ○ 정치개혁추진위원회

- 민주당, 개혁국민당, 노무현 지지그룹이 중심이 된 조직
- 민주당 개혁신당에 부응하는 지역신당조직
  - 현재 부산, 울산, 광주전남, 충남 등이 발족했으며 대구경북, 강원, 충북, 경남 등이 준비위 구성

- 노무현 정부는 정권초기 대중들의 강력한 정치개혁의 요구를 담아 시민사회와 협의하여 정치개혁안을 제출하고, 그것을 통해 정치권을 압박해야 했으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개혁신당이 만들어질수도 있으나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수호 때문에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 특히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치개혁은 아래로부터의 압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현 시점에서 정치개혁은 대중운동으로 정치권을 압박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

## 2. 시민사회

### 가. 제도개혁운동

- 대선 이후 시민운동은 정치개혁시민연대,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이하 '범국민협의회')를 통해 정치개혁을 촉구

- 범국민협의회는 4월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와 선거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정치개혁관련 27개 과제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
- 최근 정치개혁의 핵심 비례대표제 2:1에 합의, 여성 지역구 30% 할당에도 합의
  - 정치권 전반과 특히 이에 참여한 의원들도 정치개혁의 의지가 없었고, 이를 대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결의와 프로그램이 부족

○ 전반적인 정치제도 개혁논의에 있어 준거틀을 만들었다는 의의를 살려 가을 정기국회 때의 대대적인 압박을 형성하는 것이 관건

#### 나. 아래로부터의 정치개혁운동

- 대선 이후 정치개혁과 17대 총선을 바라보면서 아래로부터의 정치개혁운동이 나타남, 이 세력은 크게 지역시민운동세력과 대선과정에서 형성된 정치적 시민운동 세력으로 구분
  - 지역운동의 흐름: 지역 감정에 의해 오랫동안 ‘지역패권정당’에 시달려온 영호남과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패권정당 체제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의회개혁과 정치개혁에 대한 갈망을 표출
  - 정치적 시민운동의 흐름: 대선에서 형성된 노사모, 국민의 힘 등의 정치적 시민운동 세력은 기존 시민사회운동단체의 틀을 뛰어넘는 방식의 정치개혁운동을 전개, 이들은 인터넷을 바탕으로 적극적 참여를 기본으로 한 정치개혁운동 전개

#### ○ 영남권

##### ▶ 경남 참여개혁운동본부

- 대선 후 개혁세력을 조직화하고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5월 2일 발족(시민정치네트워크에서 발족 특강)
- 민주당, 개혁당, 국민의 힘, 노사모, 민주노총 등 다양한 세력이 참여
- 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의 사회적 연대 추진
  - 신당과 무관한 정치개혁운동 전개, 개혁후보를 만들어 새로운 정치지도력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

##### ▶ 부산

- 6월 10일, 부산시민연대 주최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의 역할” 토론회 개최(시민정치네트워크에서 발표)
- 시민운동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위한 공론화 추진
- 6월 23일, 내부워크숍을 계획하였으나 지하철 파업 중재 때문에 긴급하게 연기

- 7월 1일, 부산시민연대 주최로 공개워크숍 계획

▶ 대구경북

- 화요공부모임, 대구경북의 미래를 여는 모임 등이 6월 4일, 시민정치네트워크 공개워크숍을 기점으로 대구 시민운동 단체들과 대구시민정치네트워크 결성을 위해 논의, 경북에서는 '국민참여정치개혁연대' 결성

- 화요공부모임, 대구경북의 미래를 여는 모임, 국민참여정치개혁연대 등 3단체가 대구경북시민정치네트워크 결성을 합의, 구체적인 계획 논의는 진행중

- 시민사회단체와 무관하게 조직을 결성하였지만 다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7월 초 토론회를 계획,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쉽지 않은 상황

- 한나라당 일당 독재의 대구지역에서 정치적 다원성 확보를 위해 반한나라당 개혁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 목표

○ 충청권

▶ 대전충남

- 5월 23일, '정치개혁시민연대' 제안, 8월 발족 예정

- 범개혁신당과는 별개의 시민사회 주도의 정치개혁 운동

▶ 충북

- 다음주 시민사회단체 논의 진행

○ 호남권

▶ 광주전남

- 목포 인터넷 우리힘.com 발족식 정치개혁토론회(시민정치네트워크에서 강연)

- 5월 14일, 지식인 100인 선언, 1000인 선언

- 지역시민운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음

- 5월 30일, 광주시민협과 전남시단협 주최의 공동워크숍 "17대 총선 대응 방향" (시민정치네트워크에서 발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정치개혁협의회'를 제안하였으며, 다음 운영위원회(7월 9일) 공식적인 제안서를 제출하기로 함

- 7월 15일 광주시민협과 전남시단협 주최로 공동워크숍 계획

▶ 전북

- 5월 14일, 정치개혁포럼에서 기득권세력의 개혁신당 창당 방해에 대해 경고
- 5월 16일, 정치개혁 촉구 100인 선언
- 6월 20일, 시민행동21이 주최한 정치개혁토론회(시민정치네트워크 발표)

○ 수도권

▶ 서울

- '6월사랑방'을 중심으로 정치개혁 논의 시작
  - 6월 22일, 시민사회단체 대표·간부들의 간담회에서 '총선대응토론워크숍준비위' 결성
  - 6월 28일, 정치개혁과 제17대 총선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워크숍, "제17대 총선,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계획  
(서울, 인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비공개워크숍)
- 참여자치지역조직연대 사무국장 모임에서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 시작, 여성연합의 전국 사무국장 회의에서 총선대응에 관한 내부 논의 (7월이 지나야 가시적인 입장이 나옴)

○ 그밖의 지역

▶ 제주

- 6월 21일, (가칭)제주개혁포럼준비위원회 결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 (시민정치네트워크에서 발표)
- 시민정치네트워크와 '원칙적인 연대' 결의

▶ 강원

- 춘천시민연대를 중심으로 총선대응 논의 시작, 7월 초순에 공개토론회 개최
- 원주지역, 내부 논의 시작 (마산 공개워크숍에 참석)

○ 부문네트워크

▶ 국민의 힘

- 대선 경험 바탕으로 정치개혁의 문제를 대중적으로 전개하려 계획
- 16개 광역조직으로 구성
- 언론개혁과 정치개혁을 두 축으로 다양한 사업 진행
- 6월 30일, "우리지역정치인바로알기운동" 기자회견 (시민정치네트워크 격려사)



1단계 (6월~10월)	2단계 (9월~10월)	3단계 (11월~12월)	4단계 (1월~2월)	5단계 (3월~4월)
지역국회의원 바로알기	정치신인정보공개 새사람찾기운동	기준수립/ 지지후보 결정	좋은정치인 밀어주기 (국민참여경선)	당선운동 낙선운동

▶ 교수네트워크, 법조네트워크, 문화예술네트워크 추진 중

○ 시민정치네트워크 진행상황

- 5월 16일, 서울 6월사랑방, 1차 준비모임
- 5월 24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차 준비모임
- 6월 4일, 대구 문화방송 회의실, 1차 공개워크숍
- 6월 8일, 서울 6월사랑방, 3차 준비모임
- 6월 18일, 마산 경남도민일보, 4차 준비모임
- 6월 18일, 마산 경남도민일보, 2차 공개워크숍
- 6월 26일, 대전 충청하나은행 본점, 3차 공개워크숍(예정)
- 6월 26일, 대전 유성, 5차 준비모임(예정)
- 7월 1일, 부산, 4차 공개워크숍(예정)
- 7월 10일 전후, 광주, 5차 공개워크숍(예정)

## 17대 총선과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정치네트워크를 제안한다.

조현옥(한신대 학술원 연구교수·정치학)

### 1. 시민사회의 정치참여

▲ 한국사회에서 시민운동은 끊임없이 정치개혁의 주체였으며 정치에 참여해 왔다. 1960년 사월혁명을 기점으로 87년의 유월항쟁까지 사회운동은 정치변동의 주역이었으며, 87년 이후에는 합법화된 조직을 중심으로 영항의 정치력을 행사해왔다.

▲ 가장 열정적으로 나타났던 시민사회의 정치운동은 2000년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 그리고 2002년 대선에서의 노사모 운동을 들 수 있다. 2000년 총선연대의 활동은 조직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인 체계를 유지하며 인적청산을 위한 네거티브한 활동을 벌였다면 2002년 대선에서는 네티즌인 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인물을 당선시키겠다는 지극히 단순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 이 두 활동은 대중이 정치개혁에 대해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전자는 낙천낙선 운동 후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시민운동조직 중심이어서 개인들은 동원의 대상이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후자는 시민운동과 무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도로 이루어졌지만 구조를 도외시하고 인물만 교체되면 정치개혁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위에 서 있었다.

▲ 제도와 구조개혁을 동반하지 못한 인물청산, 또는 인물대체식의 정치개혁은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며, 시민들의 열정을 받아 줄 정치적 주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 열망은 곧 좌절로 이어지게 된다.

▲ 이제는 이러한 열망과 좌절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구조적 개혁이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시민들이 동원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며, 중앙 중심이 아닌 지역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정치운동으로 영역이 확장되어야 한다.

### 2. 시민정치의 필요성

▲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은 이미 표출되었고, 과연 누가 이것을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기존 정치권이 과연 이 정치개혁의 과제를 완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현재 민주당에서의 개혁신당론, 한나라당의 정당개혁론, 국민개혁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범개혁신당론은 인적청산에 치중하는 나머지 구체적인 개혁의 내용을 제시하지 못한다.

▲ 정치적 중립성에서 탈피하는 시민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굴레 때문에 직접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정치적 중립성은 시민사회단체의 순수성과 역여 시민사회단체가 언제나 정치권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감시·비판의 기능만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궁극적인 결정은 항상 제도권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립적인 시민운동은 그 한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정치운동으로의 영역확장이 필요하다.

▲ 지역·부문별로 모아지는 시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을 받아서 지속시킬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지역의 흐름 : 분권시대에 정치개혁을 향한 지역의 다양한 흐름이 있다. 기존의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세력들이기도 하다. 이러한 세력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치연대, 녹색자치위 등의 활동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참여운동을 담아 낼 그릇이 필요하다. 녹색후보들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정치준비모임, 내년 17대 총선을 대비하는 여성단체들의 연대체등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부문을 함께 묶어 낼 프레임이 필요하다.

### 3. 시민정치,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 영역의 확대 :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나 진입의 정치를 생각한다.

‘대의의 대행’과 ‘영향의 정치’를 넘어서는 대안으로서의 정치문제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정치개혁을 지향하는 정파 혹은 개인과 연대할 수도 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 진입의 정치를 시도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시민운동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역의 확대 및 시민운동의 강화를 의미한다. 영역을 이제까지 금기시해 왔던 정치영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혐오감과 무관심에서 탈피, -- 새로운 정치권의 가능성을 내포

▲ 주체세력의 확대 : 이제까지 시민운동은 조직을 중심으로 한 중앙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정치운동으로의 발전, 또 하나는 중앙중심에서 벗어나 지역분권과 자율적인 지역모임이 주체가 되는 정치운동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새로운 정치세력의 필요성

▲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가교로서의 시민정치 : 제도개혁과 인적청산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이를 통해 형성된 제도정치와 소통하고 또 이를 통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운동정치를 제도정치에 정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 4. 시민정치네트워크를 제안한다.

▲ 목적 : 정치개혁(정치제도와 관행의 교체), 의회개혁(정치주체의 개혁), 참여정치를 개혁과제로 놓고 추진한다. 궁극적으로는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며 시민사회에 개방적인 정치적 대안세력을 목표로 한다.

\*정당과의 연계 또는 정당지향성

▲ 주체 : 정치개혁을 위해 형성된 지역의 시민조직, 여성·환경·청년 등 각 부문조직, 네티즌을 중심으로 하는 자율적인 시민

▲ 형태 : 네트워크형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의 조건이 지역마다 부문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트워크형 조직을 지향한다. 한 개인 혹은 세력이 주도할 수는 있으나 지배하지 않는 형태.

조직과 개인은 같은 수준이 아니라 다양한 수준으로 엮어질 수 있다. 공중전과 지역정치의 병행 인터넷을 통해 지역의 경험을 공유, 전파하며 고립되어 있는 개인을 결속시킬 수 있다.

#### ▲ 활동내용

-개혁이념의 전파 및 대항담론블럭 형성 : 개혁의 내용을 확정하고 보수담론에 대항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 이를 시민들에게 전파하는 활동을 한다.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 정당명부제 도입, 정치자금 투명성, 지구당 민주화등의 제도적 개선 추진

-인적청산으로서의 낙선운동과 당선운동 : 국민적 정당성 확보, 당선운동과 낙선운동의 명확한 기준 마련,

-개혁정당 및 기존의 시민사회운동과 유기적 협조

# 정치개혁과 의회개혁,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정 대 화(상지대 교수·정치학)

## 1. 정치개혁과 의회개혁의 관계

○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을 거치는 약 1년 반의 기간 동안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정치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며, 이러한 구조개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도개혁과 세대교체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화된 문제의식이라 할 수 있다

- 제도개혁은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가 추진해 온 정치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충분한 수준의 정치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세대교체를 이룩하고 의회개혁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 중에서도 정당개혁(지구당 민주화, 진성당원제, 상향식 공천), 선거개혁(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시민의 정치참여 보장, 선거연령 인하), 정치자금의 개혁(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공개와 투명성 확보)이 가장 중요하다

- 의회개혁은 국회제도개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의 세대교체를 말하는 것이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인물들이 국회를 운영해야 하고,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국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 따라서 제도 수준의 정치개혁과 인물 수준의 의회개혁을 상호 연관지어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목표라 할 수 있다

- 올해 정치개혁을 통해서 제도개혁이 이루어지고 내년 총선을 통해서 의회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다. 정치개혁 없이는 충분한 의회개혁이 어렵고 의회개혁 없는 정치개혁은 공허한 것이다

- 정치개혁과 의회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정상적인 정치를 불가능하게 하는 ‘지역주의정치’를 뿌리부터 해체하는 것이다. 지역주의 정치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정당 민주화를 통해서 지역주의를 재생산하는 지역정당구조를 해체해야 하고, 의회개혁을 통해서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정치인들을 교체해야 한다

## 2. 정치개혁을 추진할 “정치개혁 전국연대” 결성

○ 정치개혁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단체, 노동민중단체, 정치조직, 정당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연대조직으로 가칭 “정치개혁 전국연대”를 결성하여 선거법 개정시한인 올해 12월 31일까지 정치개혁을 완

수하도록 한다

○ 전국연대를 통해 정치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제17대 총선거가 있는 2004년 4월 이전에 정치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의미있는 정치개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상황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 민주주의의 완성을 추구한 6월항쟁의 동력이 점차 약화되고, 정치개혁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6월항쟁 세대인 30-40가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현 상황에서 정치개혁을 대중적인 운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가 정치개혁을 위한 문제제기를 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되 정치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과 부정적인 태도를 감안할 때 범국민협회의의 방식만으로는 법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 3김 이후에도 효력을 발휘할 지역주의정당구조, 최근 정당개혁 논의에서 드러난 정치권의 파렴치한 태도를 내년 총선에서 심판해야 하는데 정치개혁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 “정치개혁 전국연대”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가입단체, 전국민중연대의 가입단체, 최근 발족되고 있는 다양한 정치단체, 그리고 정치개혁에 동의하는 정당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단체의 합의와 힘으로 정치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정치개혁 전국연대”는 정채개혁을 모색하거나 협의하는 조직이 아니라 사전에 합의된 정채개혁의 과제를 대중적으로 추진하는 추진기구가 된다. 이때 합의된 정치개혁의 과제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으로서, 범국민협회의의 논의 결과를 원칙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 완전한 정당명부제 도입(비례대표의 비율에는 이견 존재)
- 지구당 민주화와 관리형 지구당 위원장제 도입
- 진성당원제 도입과 상향식 공천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완전한 공개
- 시민의 참정권 보장
- 국회의 전문성, 윤리성, 투명성 강화
- 기타 부패척결을 위한 반부패 입법과제 보완

○ “정치개혁 전국연대”가 추진할 정치개혁의 프로세스는 대략 다음과 같다

- ‘정치개혁 전국연대’ 추진 선언, 조직화 착수
- 정책 단위에서 정치개혁의 목표(안) 선정
- 토론과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적 개혁과제 확정
- “정치개혁 전국연대” 공식 출범 및 개혁과제 선포
- 상반기 준비과정을 거쳐 하반기에 대중운동 방식으로 추진
- 선거법 개정 시한인 12월 31일 이전에 정치개혁 완료

### 3. 의회개혁을 위한 지지·당선운동 추진방안

○ 제16대 총선 상황과 비교할 때 2000년 총선연대의 낙선운동과 같은 방식의 참여보다는 새로운 방식의 운동적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낙선운동이 쉽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지난 총선에서 낙선 대상자의 상당 부분이 정치적으로 물러남
- (2)국민들의 보편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낙선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 (3)전국적인 수준에서 동의할 수 있는 낙선 대상자를 지정하기 어려움
- (4)동일한 운동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
- (5)정치인 혹은 낙선대상자들의 높은 반발
- (6)국민들의 높아진 정치의식이 낙선운동 이상의 대응을 요구함

- 이런 점에서 낙선운동 이후의 시민사회운동 방식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이 상황에서는 반대와 비판과 감시라는 제3자적 관점 혹은 국외자적 관점에서 벗어나 정치적 주체라는 관점이 더 무게 있게 강조된다.

○ 따라서 다음 총선에서는 2000년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을 넘어 지지·당선운동을 전개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지지·당선운동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과 이 경우 고려해야 할 문제점들은 정리한 것이다(물론, 현실적으로는 감시운동, 낙선운동, 지지·당선운동, 후보전술이 동시에 병행될 것이다)

- 지지·당선운동의 관점에서 낙선운동의 한계

- (1)정치와 선거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인식 확대
- (2)대안부재론으로 인해 유권자들에게 명확한 메시지 제공 실패
- (3)낙선대상자를 대신한 당선자들의 문제점이 낙선운동의 한계로 인식
- (4)네거티브 실렉션(negative selection)만으로는 의회개혁 불가능

- 낙선운동을 넘어선 지지·당선운동의 의미와 효과

- (1)유권자들에게 선택 가능한 대안과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
- (2)유권자와 후보자들에게 긍정적인 자치를 요구하고 확산하는 것이 가능
- (3)좋은 후보와 좋은 정책의 상호 긍정적 연결 가능
- (4)전반적으로 정치개혁과 정치발전의 가능성을 부각
- (5)의회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 지지·당선운동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 (1)시민사회운동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
- (2)특정 정당, 정치세력, 후보와의 유착 의혹을 초래할 가능성
- (3)정당과 언론으로부터의 비판 가능성
- (4)지지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로부터의 비판 가능성

○ 지지·당선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낙선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낙선대상자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로 제시했던 것처럼 지지대상자의 기준과 당선운동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2000년 총선에서 낙선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항목을 중심으로 설정되었다. 이 경우 여러 항목의 가중치가 적용되었으며, 넓은 의미에서 부패 관련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1)군사쿠데타 등 헌정파괴 관련성
- (2)정경유착 등 부패 관련성
- (3)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 (4)의정활동의 성실성 여부
- (5)지역감정 조장
- (6)기타 정책사안 등

- 2004년 총선에서 지지·당선운동은 다음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1)정치자금의 투명성(깨끗한 정치인)
- (2)정책과 활동의 개혁성(개혁적인 정치인)
- (3)의정활동의 성실성(성실한 정치인)
- (4)정당활동의 민주성(민주적인 정치인)
- (5)탈지역주의적 노력(지역주의를 배격하는 정치인)
- (6)국민참여의 증진(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인)

○ 시민사회운동단체는 제17대 총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1)바람직한 정치인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형성하는 단계, (2)바람직한 정치인들이 당내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될 수 있도록 당원이나 국민경선의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단계, (3)선거운동 과정에서 바람직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당선운동을 구체적으로 전개하는 단계의 3단계로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 제1단계에서는 누가 좋은 후보인가, 시민사회단체의 총선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총론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이며, 이 과정에서 선거개입의 전략과 기준이 마련된다

- 제2단계에서는 개혁적인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는 '당원가입운동'(진성당원운동)을 전개하거나 지지하는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에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는 '국민경선 참여운동'을 전개하여 개혁적인 후보가 선출되도록 한다

- 제3단계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지지후보를 선정하여 발표하거나 특별히 지지하는 후보를 위한 당선운동을 전개한다

○ 당원가입운동이나 국민경선 선거인단 참여운동이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전개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운동만이 지구당 민주화와 상향식 공천이라는 제도개혁을 실질적인 정당민주화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이 운동만이 정당을 구조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이 운동만이 지역주의에 안주한 부패하고 낡은 정당을 개혁할 수 있다

○ 선거운동 기간 동안 추진할 지지운동과 당선운동의 범위는 선거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것이다. 지지운동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선거구에서 바람직한 후보, 즉 지지하는 후보를 선정하여 발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선거구의 상황이나 후보의 경합상황이 지지후보 선정에 부적절할 수도 있



다. 지지후보의 범위를 가급적 확대하느냐 최대한 축소하느냐 하는 문제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반면 구체적인 당선운동의 경우에는 운동의 역량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전망하기 어렵다

#### 4. 시민사회단체의 과제

○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지지·당선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지·당선운동에 대한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 지지·당선운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당과 국회를 포함한 현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확인되어야 하며,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는 방법이 총선에서 지지·당선운동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의회를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 2000년 총선에서 총선연대를 결성하여 낙선운동을 전개했던 시민사회단체가 낙선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지·당선운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의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 낙선운동에서 지지·당선운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학술토론회, 여론조사, 정책토론회, 현안 분석, 정세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지·당선운동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되도록 한다. 정치학회, NGO학회, 정당학회 등의 학술토론회를 통해 지지·당선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의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서 시민사회운동단체의 총선 대응 방식에 대해 다양한 토론을 전개한다.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필요하다